

KT&G
반부패 및 뇌물 방지 정책



KT&G ANTI-CORRUPTION & BRIBERY POLICY



2023. 8. 3 제정
2025. 8. 7 개정

KT&G 반부패 및 뇌물 방지 정책

개요

목적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서 KT&G와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비롯하여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등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UN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KT&G 및 KT&G의 국내외 자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협력업체(파트너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현지의 법령, 회사의 정관 및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본 원칙

법령 준수

모든 거래에서 뇌물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현지 법령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 적용되는 법령 또는 국제 표준이 본 정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뇌물 수수 및 공여 금지

국가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나 용역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상의 지급금(예: 급행료)이나 소정의 선물인 업무 촉진비의 제공은 금지됩니다.

부정한 청탁 금지

사업상 이익 또는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선물 및 접대

사업상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는 뇌물 수수 또는 공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업무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한 선물 및 접대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특유한 법령, 문화, 관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물 및 접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가증권, 현금, 주류, 식사 등의 금품 제공
-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할인 등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부금 또는 후원금

기부금 및 후원금은 관계 법령과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며, 어떠한 임직원도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정당, 정치인 등에게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육 및 훈련

KT&G는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자, 본 정책과 관련된 법령 준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구성원은 윤리실천서약서 작성, 윤리경영 캠페인 등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진행하는 교육 및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책 운영

비윤리행위 신고 제도

KT&G는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체계를 마련 하여 정기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위반한 사례를 목격한 사람은 KT&G [비윤리행위 신고채널](#)을 통해 이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KT&G의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에 의거하여 신분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KT&G는 본 정책의 위반에 대해 관련 사규에 따라 비윤리 행위 중지•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정책과 관련 사규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문제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 회사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항상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